

발행일 2018. 6. 15.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박재욱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제 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대전세종지역 행정동별 인구감소 현상과 정책적 의미¹⁾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혜진

I. ‘지역소멸’ 담론의 등장

최근 한국 인구구조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으로 연구자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꼽는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을 견인한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자연 출생 인구의 감소라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자연 출생 인구의 감소 관련한 담론이 우려 및 걱정과 섞여 주요한 사회문제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등장한 충격적 화두가 ‘지역소멸’이다.

마스다 히로야의 책 『지방소멸』은 대도시로만 인구가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대도시가 지방 소도시들의 인구를 흡수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재생산하지는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 인구를 빼앗긴 지방도시도, 인구를 흡수한 대도시도 결국 소멸할 것이라는 경고성 결과를 도출했다. 마스다 히로야의 경고는 일본과 유사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몇몇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을 보이는 우리 사회를 다시 돌아보고, 출생뿐 아닌 인구의 이동 그리고 도시 간 인구 유출입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본고는 지역소멸의 위험 정도를 대전과 세종지역의 행정동 단위에서 살펴보고, 광역도시 내 발생하는 극점화 현상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소멸위험지수²⁾’는 지방자치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도시 간 인구 유출입 경쟁관계를 부추기는 곤혹스러운 지표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행정동별 소멸위험지수의 산출은 한 도시 내 발전의 불균형 혹은 삶의 질적 불평등을 고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로 의미가 있으며, 이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 삶의 공간(동네)의 질적 개선, 불균형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II. 대전과 세종시 행정동별 지역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

지역소멸위험지수란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율³⁾로, 소멸위험지수가 1.0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0.5이상 1.0미만이면 소멸주의지역, 0.2이상 0.5미만이면 소멸

위험진입지역, 0.2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소멸위험지수의 인구사회학적 논리 전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젊은 여성이 감소하면, 자연출생 또한 감소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 경제 위축과 세수(稅收)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를 유지하는 경제, 사회, 공공인프라의 쇠퇴와 인구 유출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산출된 지수에서 중요한 지표는 젊은 여성의 비율이며,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숫자가 작아지면서, 위험도는 커진다.

아래 <표 1>은 전국 시도별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다.

<표 1> 전국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추이

구분	2005	2010	2015
전국	1.75	1.30	1.01
서울특별시	2.53	1.78	1.24
부산광역시	1.83	1.20	0.88
대구광역시	2.06	1.39	0.99
인천광역시	2.35	1.71	1.29
광주광역시	2.44	1.72	1.26
대전광역시	2.47	1.77	1.31
울산광역시	3.05	2.00	1.46
세종특별자치시	-	-	1.44
경기도	2.37	1.73	1.30
강원도	1.07	0.77	0.65
충청북도	1.22	0.95	0.82
충청남도	0.96	0.84	0.75
전라북도	0.95	0.74	0.63
전라남도	0.66	0.50	0.47
경상북도	0.95	0.73	0.62
경상남도	1.37	1.04	0.85
제주특별자치도	1.47	1.01	0.85

출처 : 전국시도연구협의회(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울산(1.46), 세종(1.44), 대전(1.31) 등은 소멸위험이 크지 않으나, 대구(0.99)와 부산(0.88)은 광역시임에도 소멸위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대전과 세종시는 젊은 여성이 고령인구에 비해 많아, 소멸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전의 위험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본고는 2017년 전국시도연구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2017년 12월 31일 발행)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2)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3) 지역소멸위험지수 = 가임기 여성인구(여기서는 20~39세 여성) ÷ 65세 이상 인구

아래 <표 2>는 2015년 기준 전국 3,492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위험군에 따라 분류한 결과다.

<표 2> 전국 소멸위험지역 유형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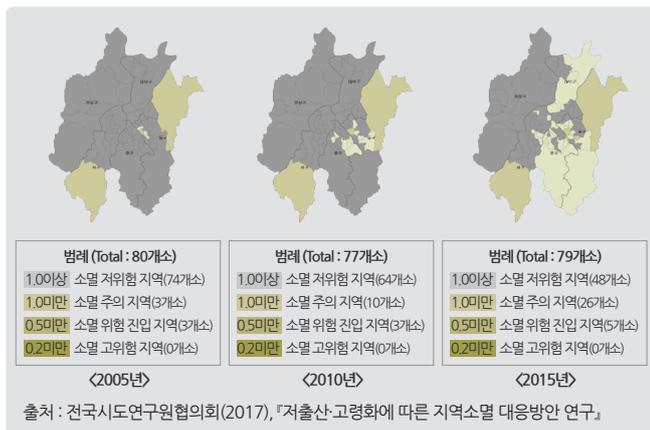
구분	소멸 저위험 지역	소멸 주의 지역	소멸 위험 진입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
서울특별시	312	111	1	0
부산광역시	58	116	32	0
대구광역시	48	81	10	160
인천광역시	91	31	16	11
광주광역시	46	40	5	4
대전광역시	48	26	5	0
울산광역시	42	9	3	2
세종특별자치시	4	1	8	0
경기도	351	114	82	8
강원도	26	46	69	47
충청북도	33	32	25	63
충청남도	41	32	48	86
전라북도	30	39	54	118
전라남도	32	24	66	175
경상북도	50	40	77	165
경상남도	65	64	60	126
제주특별자치도	11	19	13	0

출처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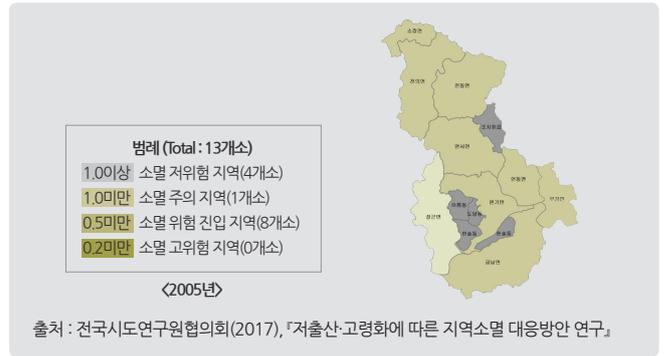
2015년 기준으로 대전 중구(0.85)가 5개 기초자치구 중에서 가장 소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동구(0.96)가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에는 '소멸고위험 지역'(행정동)은 없었지만, 동구 중앙동(0.27), 대청동(0.26), 판암2동(0.43) 그리고 중구 문창동(0.41)과 서구 기성동(0.21)이 '소멸위험진입지역'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세종시 1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8개 지역이 '소멸위험진입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현재 17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시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소멸위험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소멸위험에 진입한 지역들이 전동면(0.23), 연서면(0.35), 연동면(0.38) 등 면단위 농촌지역으로 인구 과밀 현상을 보이는 신흥주거지역들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은 대전과 세종지역의 지역소멸지수 산출 결과를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 대전지역 행정동별 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



<그림 2> 세종지역 읍면동별 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

III. 행정동별 인구감소 현상의 정책적 의미 : 소멸에서 상생으로

행정동별 인구감소 경향을 살펴본 결과, 대전과 세종지역 모두 도시 내 인구의 불균등한 분포 경향이 뚜렷했으며, 특히 세종지역의 인구 극점화 현상은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는 4.98에서 0.23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흥주거지역과 이를 둘러싼 농촌지역 간 인구 분포 및 밀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전지역 내 소멸위험은 2015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지수보다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대청동과 기성동은 농촌지역으로 소멸위험지수의 변화가 2005년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판암2동과 문창동은 각 1.39에서 0.43, 1.01에서 0.41로 10년 동안 위험도가 크게 높아졌다. 즉, (중앙동을 포함해) 도시 한가운데에서 소멸의 위험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도시 내 특정 지역의 복합적 쇠퇴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도심 공동화 혹은 슬럼화를 유인하는 '도심 지역소멸위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성 있는 자립형 도시재생 정책이 요구된다. 판암2동과 문창동의 경우, 노령인구의 증가를 악조건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주제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사회적 약자 친화형 마을'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인구감소 유형과 비슷한 대전의 대청동, 기성동이나 세종의 면단위 지역들은 매우 가까운 곳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소비 인구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 협동조합활성화 등을 통한 도심과의 공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량한 녹지와 신선한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도심과의 연계는 마을기업 활성화와 유통 및 소비 플랫폼 제공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인구의 증감은 서로 뺏고 빼앗기는 경쟁의 논리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는 상생의 논리로 풀어갈 우리의 숙제다.

5월 대전 경제동향



종합평가

최근 전월대비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건설경기가 위축되었으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고 수출이 증가하여 미약하나마 회복되는 모습임. 전년동월대 비로는 수출, 생산 및 소비가 감소하고, 건설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고용상황 역시 악화되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임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1월, 3월, 11월을 제외하고 후퇴국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나, 2018년 2월 들어 상승함. 경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6년 10월 이후 2017년 3월까지 후퇴국면을 보였고, 4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2017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보임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1~2월 높은 기저 효과* 영향 등으로 광공업 생산 투자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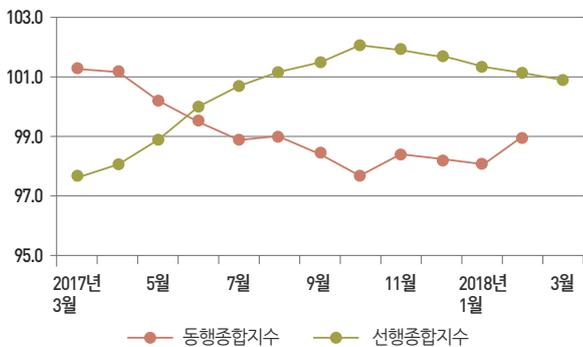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이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함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민생 개선이 체감될 수 있도록 '18년 경제정책방향 및 청년일자리대책, 2단계 지역대책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 기저효과: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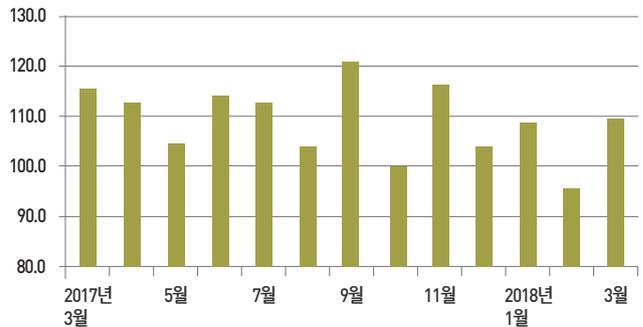
01

경기지수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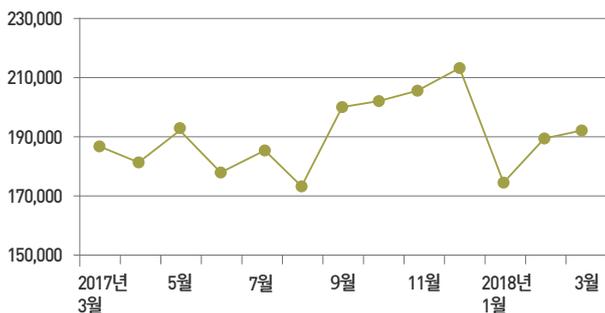
02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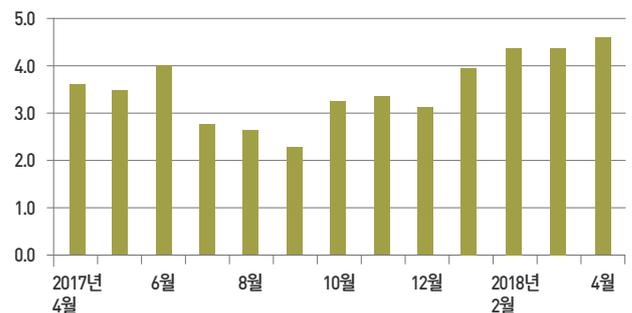
03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04

고용 실업률



5월 세종 경제동향



종합평가

최근 경기측면에서는 소상공인 체감지수가 2018년 1월 크게 하락하였다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4월에는 77.5로 전월(90.0) 대비 13.9% 하락하였음. 세종지역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에 대한 전망은 전월 대비 나빠진 것으로 보임

생산측면에서는 광공업 생산지수와 출하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 전국의 광공업 생산지수, 출하, 재고지수 또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여 향후 국가 전체적인 생산측면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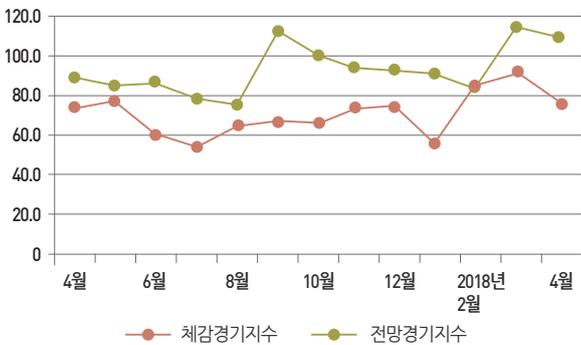
4월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102.9로 전년 동월(100.5)대비 2.4% 증가, 전월(102.9) 대비 포함인 것으로 나타남. 4월 주택전세 가격지수는 100.1로 전년 동월(100.7) 대비 0.6% 하락, 전월(100.4)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4월 경제활동 인구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13만명) 대비 13.1% 증가, 전월(14만 4천명) 대비 2.1% 증가함. 취업자는 14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12만 7천명) 대비 30.0% 증가하였고, 전월(13만 9천명)대비 3.6% 증가함

4월 실업률은 1.9%이며, 전년 동월대비 0.1%p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1.1%p 감소함. 4월 전국의 실업률은 3.0%이며, 전국에서 제주도(1.5%) 다음으로 세종지역 실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세종지역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7년 11월 이후 감소하였는데 4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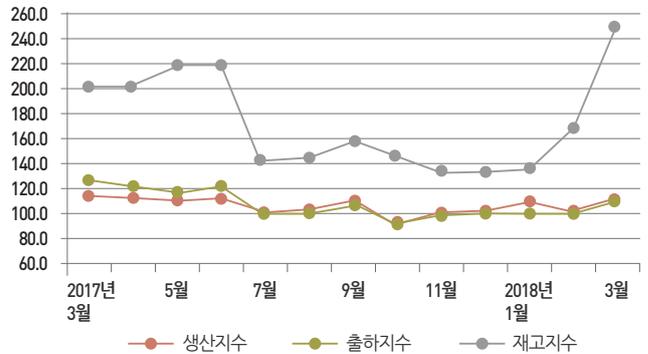
01

경기지수 소상공인 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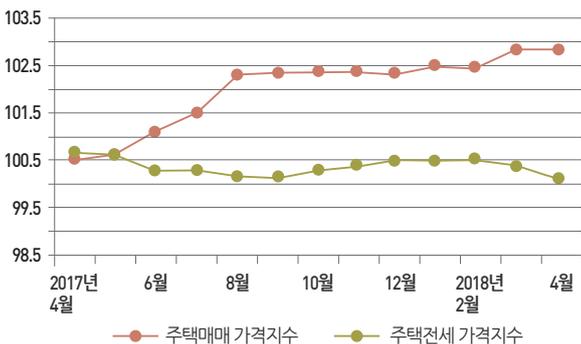
02

생산 광공업 생산지수 추이



03

부동산 부동산 가격지수



04

고용 실업률

